

Hansun Brief

발행일: 2018년 5월 10일(통권58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문재인 정부 1년 정책 평가(총론)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목 차

1. 문제의 제기-국민과의 약속
2. 지난 1년의 화두와 정책
3. 결론 및 제언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요 약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정운영과 정책에서는 문제와 부작용이 많았다. 남은 임기동안 고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먼저 1년 내내 화두가 됐던 적폐청산작업은 이제 과거로부터 벗어나서 미래로 나가야 한다. '자유'가치 논쟁도 더 이상 문제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자유의 가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오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의 핵심과제인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은 실현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삶의 질과 관련하여 '소득주도정책'은 '혁신주도정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정책운용의 틀도 정부주도에서 시장중심으로 무게를 옮겨가야한다. 변화가 지체되면 될수록 성장은 정체되고 청년 실업과 소득 불균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1. 문제의 제기—국민과의 약속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이다.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은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변화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노정됐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 취임연설에서 적시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 1년 동안 펼친 정책을 살펴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소통과 국민통합 그리고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의 결별"을 강조했다. 안보통일문제에서는 "자주 국방력 강화와 북핵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할 것임을 약속했다. "야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대하고 능력과 적재적소의 공정인사, 재벌개혁, 겸손한 권력, 비정규직 문제 해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감으로서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취임 초 문대통령의 행보는 소통과 국민통합에 힘쓰면서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6.6 현충일 행사에서 군인과 국가유공자 자리를 앞에 배치하고 노병을 부축하는 장면이 그러하고 8.15 광복절 행사에서 독립지사와 위안부 할머니를 배려한 자리배치도 그러했다. 이것을 보고 일부에서는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여론 조사는 대통령에 대한 높은 국정지지도도를 보였다.

취임 초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갤럽, 5월 19일)는 역대 최고 기록(88%)을 보였다. 100일 국정수행 평가(갤럽 8월 8~10일)는 긍정 평가 78%, 부정 평가 14%, 유보 8%로서 높은 지지율이 이어졌다. 취임 1년 국정지지도 역시 역대 대통령 1년 평가로는 가장 높은 83%였다(한국갤럽 5월 2~3일). 남북정상회담 효과와 야당의 저조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높은 지지율이다.

이러한 높은 국정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취임사에서 밝힌 국민전체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다. 합리적 판단보다 정이 우선하는 사회, 대립과 갈등에 익숙한 사회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낙관하기에는 이미 국론의 분열과 국민간의 갈등의 골이 돌이기 힘들 정도로 깊어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 지난 1년의 화두와 정책

1) 1년의 화두: 적폐청산

지난 1년의 화두는 적폐청산이었다.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작한 적폐청산 작업은 국민들에게 기대를 안겨주었다. 이런 기대를 갖게 된 배경은 과거에 잘못 형성된 기득권을 없애지 않고 미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었다. 국민들은 새로운 미래를 위해 오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적폐청산작업이 국민들이 기대했던 나라 발전을 위해 미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함몰되면서 실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줄어들었다.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 참모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기업경영자들도 적폐청산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적폐청산은 정치 중립적인 공무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국정교과서 사례처럼 상사의 명령이나 보직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조차 적폐청산대상이 되다보니 공무원들은 복지부동·복지안동을 넘어서 책임이 따르는 일은 피하려고 한다. 이렇듯 적폐청산작업은 긍정적인 효과 못지않게 많은 부작용을 유발했다.

2) '자유' 가치논쟁: 국가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주의'는 왜 중요한가? '자유주의'는 개인의 존엄·자유·창의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사상이다. 여기에서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했고 실

제 '자유주의' 사상이 인류의 발전과 진보를 유발했다. 현대 국가에서도 '자유주의'는 '개인 발전의 원리'인 동시에 '국가발전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자유의 가치는 좌·우, 진보·보수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로 여겨졌고 지켜져 왔다. 그런데 갑자기 헌법 개정이나 교과서 개정 지침에서 '자유' 용어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나타나면서 논쟁이 유발되었다.

먼저 '자유' 논쟁은 국가정체성과 관련하여 유발됐다.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대한민국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터이다. 다행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헌법개정안에는 '자유'용어는 살아났지만 규정 곳곳에 자유민주주의를 제약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경제가치인 시장경제도 마찬가지이다.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토지공개념을 비롯하여 자유 시장경제를 제약하는 규정들이 상당하다. 경제가 발전하려면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자유화'로 가야하는데 정부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는 오히려 거꾸로 가려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가 지난 9차례 헌법 개정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경제자유화가 진전됐던 제5차 헌법개정(1962.12.26)이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오늘날의 풍요를 이룬 밑바탕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자유화'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60일 내에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폐기되었지만 앞으로 국가 정체성과 관련하여 '자유' 가치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2018.5.2)한 새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안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뀐 것¹⁾이 그 사례이다.

1) 조선일보, 새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논란, 2018.5.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0258.html)

3) 인사원칙 훼손: 도덕성

인사원칙의 훼손은 주로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대통령 후보시절에 약속한 인사 5대 원칙(위장 진입,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표절)이 초기 내각과 대통령비서실 구성에서부터 차질을 빚었다. 내각을 보면 소수를 제외하고 5대 원칙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도 국회의원 시절 직무와 관련된 피감기관의 도움으로 외유를 한 것이 밝혀지면서 도덕성 흠결로 낙마했다. 각 부처 인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기업, 방송사까지 코드인사·낙하산 인사가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이미 민영화되어 사기업이 된 하나은행, POSCO, KT 인사에서도 물같이 차원에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여기에 취임 1년 가까운 시점에서 터진 드루킹 사건은 도덕성을 내세운 정권에 또 다른 차원에서의 흠을 남겼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동기는 인사 청탁이었다. 도덕성에 흠결이 있으면 국민 설득은 어렵다. 도덕성을 잃은 상태에서 정의를 주장한들 무엇이 정의냐고 반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국가적 이벤트: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

지난 1년간 국가적 이벤트는 평창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이다. 올림픽은 세계 스포츠제전이고 남북정상회담은 정치적 대 사건으로 이 둘은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연계되어 있다. 평창올림픽은 안전이 과제였다. 많은 나라들이 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의 도발을 염려했다. 정부는 안전올림픽을 위해 북한 참가에 공을 들였고 결국 북한의 참가로 안전에 대한 우려는 해소됐다.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올림픽 기간 중 북한의 고위 인사가 오고 예술단이 공연하고 우리 선수들이 북한지역에 가서 훈련하는 등 남북관계가 해빙무드로 급진전 됐다.

평창올림픽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특사를 보냈고 특사단은 2018년 4월 말 판문점(남쪽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

였음을 발표했다. 특사단은 미국까지 방문하여 미북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4월 27일 개최되었다. 미북정상회담도 5월말 또는 6월 초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듯 평창올림픽이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의 디딤돌 역할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판문점 남측 장소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됐다. 그동안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이 모두 평양에서 개최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개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상회담의 핵심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였다. 북한은 이미 6차 핵실험(2017.9.3)에 이어서 미국까지 이를 실어 나르는 미사일(ICBM 화성 15형)실험까지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최대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정책을 폈고 유엔과 EU 국가는 물론 중국까지 동참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 유엔의 국제적 압박이 남북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내는 또 다른 동인으로 작용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상호 불가침 합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골자로 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정상회담 전에 많은 전문가들은 협상의 핵심과제는 비핵화라고 주장했지만 남북정상회담을 끝내고 발표한 성명서에는 '북한의 비핵화'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나타났다. 비핵화의 실현여부는 미북정상회담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후속 조치이다.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 약속²⁾에도 불구하고 약속이나 협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듯이 구체적인 사항까지 신중하게 살피고 실행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2)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 약속은 1991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도 천명되었지만 북한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2017년에는 6차 핵실험을 하고 ICBM 미사일발사 실험을 했다.

5) 국민의 삶: 소득주도정책, 미세먼지 대책, 교육·복지정책

지난 1년 국민의 삶은 얼마나 좋아졌는가? 여론조사³⁾에 의하면 1년 전과 비교해 체감경기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11.8%, 나빠졌다 49.4%,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38.8%였다. 취업시장에 대해서는 나아졌다는 응답은 9.9%에 불과한데 나빠졌다는 응답은 51.6%였다. 38.5%는 변화가 없다는 응답을 보였다. 여론조사 결과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좋아지기 보다는 나빠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1년간 시행된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등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3월 고용동향을 보면 매월 30만 명 전후의 증가세를 보이던 상용근로자 수가 2월에는 10만 4,000명, 3월에는 11만 2,000명에 머물렀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수준과 관련이 높은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임시근로자는 2월에 18만 2,000명, 3월에 9만 6,000명 그리고 일용직은 2월에 8만 5,000명, 3월에 1만 6,000명이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가 2월에 6만 3,000명, 3월에는 4만 1,000명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는 2월에 2만 1,000명, 3월에 4만 3,000명이 감소했다.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은 일자리를 늘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일 먼저 추진했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가 교대생과 기간제 교사간에 갈등을 빚으면서 무산됐다(2017.9.13). 작금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하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민간 기업으로까지

3) 조선일보, 한국경제연구원 의뢰,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성과에 대한 국민 인식. 2018.4.27~29, 만 19세 이상 남녀 800명 대상(출처: 조선일보, 2018.5.4)

확산되고 있지만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등 노동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경제상황과 맞물려 일자리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특단의 대책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보전대책(2018.3.15)'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34세 이하 청년이 임금의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3년간 연 800만원을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한다.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하고, 전월세 보증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준다. 교통이 열악한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청년에게는 매일 10만원 씩 교통비도 지원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일시적으로 젊은이들의 중소기업 지원 촉진요인은 될 수 있으나 일자리 창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정부지원은 기존 직원들과 임금역진 현상을 초래하여 기업은 기존 직원들에 대한 임금인상 압박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이 전개 되면 영세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기업경영을 어렵게 함은 물론 자칫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최저임금 못지않게 근로시간 단축도 소득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당 근무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서 300인 이상 사업자는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받는다. 기업들은 정책변경에 따른 적용시기에 대한 유예 없이 실행되는 관계로 적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적용대상도 26개에서 5개로 줄었다. 여기에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된다. 산업현장에서는 시행 전인데도 걱정이 태산이다. 이렇듯 취약계층 보호를 명분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이들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경제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법인세율을 인상한 것도 기업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기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기업 환경이 좋아져야 만들어 지는데 현실은 그 반대이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재벌정책 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정책을 예측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의 일관성 결여⁴⁾와 신뢰 약화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작용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불가피하게 기부금을 낸 기업들이 고초를 겪으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저하는 물론 기업인들의 '경제 하려는 의지'까지 약화됐다. 이렇다보니 일자리는 만들어지기 보다 줄어들고 있다.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정책의 불확실성임을 정책당국은 새겨들어야 한다.

소득주도정책 외에 삶의 질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미세먼지 대책, 교육정책, 복지정책이다. 그런데 미세먼지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교육정책은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복지정책은 감당할 수 있는 재정능력에 대한 우려이다. 봄철 미세먼지 대책을 보면 민간사업장과 공공기관 미세먼지 저감 대책 동참활동,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5기)외 다량 미세먼지 석탄발전소 감축운영 검토, 한중 미세먼지 공동연구 및 협력센터 설치,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및 마스크 무상보급 검토, 금년 9월까지 미세먼지 5~10% 추가 감축대상 발굴이다. 5개 정책이 열거되고 있지만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이 없다. 대책이라고 보기보다는 정책검토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교육정책 역시 일관성을 잃고 있다. 정책을 발표했다가 여론이 나빠지면 없는 것으로 하거나 연기되는 행태를 보였다. 자사고·외고의 특목고 폐지 방침은 일반고 동시 선발제도로 바뀌었고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2017.12)는 시행 결정을 1년 유보

4) 사례를 보면 법무부의 가상화폐(비트코인) 대책, 고용노동부의 삼성 사업장 공정배치도 공개 여부,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공개 등.

했다(2018.1). 대학입시도 2021년 수능개편을 발표(2017.8.10.)했다가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재결정했다(2017.8.31). 2022학년도 대입시 개편안은 교육부가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회의로 이관(2017.8)했다.

복지정책은 지난 1년간 많은 변화를 보였다. 눈에 띄는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인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등이다. 핵심은 문재인 케어로 일컬어지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이다. 미용·성형을 제외하고 대부분 의료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납부자도 환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바뀌고 진료비도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바뀌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책임성과 신뢰성이 더욱 중요해진다.

복지정책은 자칫 포퓰리즘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고 재정부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재원조달방안을 명기하고 적정성과 합리성을 분석하는 검증 시스템과 국가지출 제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6) 갈등해소 기제: 공론화 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정책 운용 중 특이 사항은 공론화 위원회 활용이다. 공론화(公論化)란 특정한 공공정책 사안이 초래할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인 동시에 합리적 갈등 해결의 한 방법이다.⁵⁾ 문재인 정부가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탈원전 정책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탈석탄+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이다. 그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노후 화력발전소 전면 폐쇄와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이다. 이에 따라 공사 중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에 대한 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졌다. 그 직후에 찬반양론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찬·반 갈등이 확산되자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자는 대안이 제시됐다. 공론화 위원회가 구성되고 3개월 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론은 신고리 5,6호기 원전공사 재개였다. 원전공사에 반대하던 측에서도 결과 발표 당일 바로 결과를 수용하여 전반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신고리 5,6호기 찬반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이 성공을 거두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갈등 해소차원에서 공론화 위원회를 활용하려고 했으나 소요 비용이 적지 않게 든다는 것을 알고서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가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갈등이 야기되자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시 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이관(2017.8)했고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의 적정 비율, 선발시기(수시·정시모집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상대평가·원점수제) 등 2022학년도 대입제도 관련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했다. 이송 받은 국가교육회의는 4개월 간 국민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과 국가교육회의의 자문을 거쳐 오는 8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론화 위원회가 갈등의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기획의 정교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가 치밀하게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공론화 위원은 물론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표성도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운영의 공정성은 물론 자료화 작업과, 분석력이 밀반침되어야 하며 특히 '숙의(熟議)'과정이 중요하다.

5) 이윤석, 공론화위원회의 경험과 정책결정과정의 새로운 변화.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프리미엄리포트, 2018.3.29

3. 결론 및 제언

지난 1년 간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높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잘 된 정책은 지속적으로 실천해가야 하지만 부작용을 유발한 정책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 분야별로 보면 지난 1년간 화두가 됐던 적폐청산 작업은 과거에 매몰되기보다 미래로 나가야 한다. 잘못된 과거의 관행이나 누적된 폐해는 마땅히 고쳐야 하지만 과거에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 안 된다. 국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면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운영에서 확고한 정체성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자유' 가치 논쟁은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 자유의 가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오늘이 있게 한 원동력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덕성 문제도 꾸준히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후속조치는 '북핵 폐기'에 초점을 맞추어 차분하게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소득주도 정책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일자리 창출로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이들의 소득을 올려주겠다는 선의의 정책이 결과적으로 그 반대 현상을 초래했다면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에서 혁신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정부주도에서 시장중심으로 정책운용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수요자들 역시 정책에 순응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다. 지난 1년의 정책은 남은 임기동안의 정책선택과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지난 1년의 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향후 정책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